

온새미

Onomad.club



프랑스 영주권 취득 가이드스 (연재 1편)

중의 한나라인 쿠웨이트 시민들은 시티즌 자격으로 엄청난 재정적 사치를 누리는 반면, 같은 쿠웨이트 사람들이었던 사막의 비둔은 제외된 시티즌들로 사막에 버려진 묵인된 영주권자들이다.

“비둔”은 독립당시 쿠웨이트 국적을 받지 않은 다양한 사람들을 영국이 1961년에 보호국을 종식했을 때, 인구의 3분의 1은 새로운 국가의 “창조자”에 기 초하여 국적을 부여 받았으며, 3분의 1은 시민(시티즌)으로 귀화되었고, 나머지는 아랍어로 비둔.진시아 ‘bidoon jinsiya’ 무국적자로 불린다. 쿠웨이트 정치가 매우 엘리트주의적이며 본질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뒤쳐진 사람들에게는 차별적인 대우와 동정심이 부족한 점에서 비롯된다.

많은 쿠웨이트 정치가들은 비둔은 사실상 국가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국가 (이라크, 시리아, 사우디 아라비아) 출신의 국민들이라고 주장한다. 비둔이라고 주장하는 소수의 외국인들이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로 -혹은 그럴수도- 대다수는 양쪽 나라에서 모두 국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수십년간 세대가 교차하는 동안 내란과 전쟁에 위말린 출신국과 영주국 사이에 해당국적을 해결할수 없는, 모순의 묵인된 ‘영주권자’들이 된 것이다.

사전에 고려해 보는 다른 대륙들의 4개 나라 영주권 참고사례

골프클럽 멤버가입처럼 개인, 가족의 미래를 위해 거주목적과 필요에 따라 희망하는 나라가 요구하는 적절한 멤버가입 조건을 구비하여 자유로이 거주.이동할 수 있는 21세기 글로벌 레지던스 시대가 사실상 가능해졌다.

유엔이 인정하는 195개 나라들중 유럽 정착을 위해 프랑스 영주권의 필요성과 정착방법 및 향후 장기적인 가족설계에 앞서 서로 다른 대륙들의 4개 나라 영주권을 참고적으로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영주권을 희망하는 나라의 정치.사회제도가 수십년후 어떻게 변모할지 늘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40여년의 짧은 정착경험을 해온 재불 한인커뮤니티가 선택한 프랑스는 현재 16.000여명의 학생,재불한인 제 3세대 이외에 프랑스인 배우자를 둔 3.000여 가족, 12.000여명의 입양아들이 있다. 학업을 마치고나 4-5년 이상 정상적인 체재를 증명하면 누구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5년후에는 프랑스 시민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1%만이 부분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해 온 한국은 단계적으로 허용의 폭을 확대해 갈 수 있는 동북아의 유일한 나라로 이중국적, 다국적 글로벌 이동생활에 유리한 나라로 더욱 기대가 되고 있다. 또한 프랑스 패스포드도 북유럽과 한국,일본,싱가폴과 함께 세계 최상위 국가랭킹 (Passport Qualification Index)을 유지하고 있다.

1) 쿠웨이트 시민의 약 10%를 차지하는 비둔 영주권자들 (중동)

쿠웨이트 사막의 다양한 영주자들은 비둔이라 불리며, 이들은 어느나라의 국적인가? 올해는 쿠웨이트 독립 59주년이자 1961년 무국적자 축소 협약 59주년이 되었다.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

비둔 문제는 쿠웨이트와 같은 부유한 국가에서는 부끄러운 일이다. 쿠웨이트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리소스를 갖추고 있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의 문제인 것처럼 가장해 왔다. 쿠웨이트는 무국적자들 문제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대응도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비둔의 대다수는 가장 기본적인 시민권의 권리조차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쿠웨이트 국민과 결혼하였지만 출생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그결과 당국은 공립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거부한다. 실제 쿠웨이트 사막에서 만난 이들의 ID카드를 확인해 보니, 할아버지가 현재의 쿠웨이트 땅에서 1930년에 태어났고, 본인 ID카드는 1950년대에 발행한 쿠웨이트인들인데도 비.쿠웨이트(non-kuwaiti)인들이다. 쿠웨이트는 여성국적자에게 자녀들의 국적부여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쿠웨이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혹은 비둔 남성은, 국제법의무를 완전히 위반하는 쿠웨이트에서는 무국적 아동을 낳게 된다.

어떻게 이런 모순이 발생할 수 있는가? 쿠웨이트든 비둔이든 외국인이든 여성이 병원에서 출산기록을 할 경우 법에 따라 2주 이내에 출생증명서를 발부받아야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상, 병원은 부모의 국적을 기록해야 하며, 비둔은 일반적으로 다른 주에 거주하는 국민이거나 단순히 “쿠웨이트 이외의 국가”라는 서명을 하도록 병원측으로 부터 요구 될 것이다. 일부는 자신과 자녀의 국적에 대해 위대모을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부하는데 결과적으로 당국은 자녀의 이름을 출생 증명서에 기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부모가 병원기록에 서명하는 경우에도 당국이 출생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결혼 증명서를 제공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비둔은 위에서 설명한 여러가지 이유로 결혼 증명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출생증명서를 취득 할 수 없다.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자녀는 공립학교 입학은 물론, 기본 예방접종을 포함하여 정부보조금을 받는 건강 관리 혜택에서 제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서류없이 추가교육에 등록 할 수 없다. 명백한 사회적 차별이며 이것이 쿠웨이트의 국제법에 따른 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 일뿐만 아니라, 쿠웨이트의 가장 큰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는, 좌절과 절망속에 살아가는 비둔들의 깊은 분개를 야기하고 있다.

비밀에 붙여진 사실을 폭로한 이란출신 스위스인 Atossa Araxia를 2016년 제네바에서 만나 보았다. 세계 최상위권의 부유한 나라 쿠웨이트 정부는 물론 비둔들이 거주하는 주변국들은 국제적인 비난을 피하기 위해 무국적자들 비둔을 아프리카의 섬나라인 코모레스 (Comores) 정부와 수천 명분의 벌크 패스포트 구입을 위한 거래를 하기도 했다. 유엔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여 각개인에게 국적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사막에 버려진 비둔을 방치해둔 쿠웨이트 정부는 이를 숨기기 위해 코모레스 국적자들로 내몰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존엄한 권리를 정부가 운명지으려는 ‘본인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쿠웨이트 정부에 의한 개인의 국적변경’ 시도인 것이다. 당시 코모레스의 대통령 Ahmed Abdallah Sambi과 부대통령은 벌크 패스포트들을 인쇄하여 벌어들인 이 거래금으로 도로를 건설하고, 쓰레기들을 수거하고, 연료를 수입하여 사회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사용하겠다고 말한다.

북한과 오랜 수교역사를 가진 쿠웨이트에는 2천여명의 북한근로자들이 북한정부의 외화벌이를 위해 급여액의 90%이상을 수탈당해 왔던 노예생활을 해왔으며, 12월 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규정한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본국 송환조치로 많은 노동자들이 지난 12월 귀국한 움직임도 포착되었으며, 쿠웨이트 부호들 소유의 개인빌라들의 값비싼 벽화들을 그려주며 장기계약을 한 북한 1급 화가들의 잔류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2)일본의 영주권자들 Chosen-seki Zainichi 82만 한국인 (824,977명-2019 재외동포현황)

일본에서는 국적을 부여하는 기준이 Jus Soli의 ‘출생지 주의’가 아니라, 일본 국적에 따라 일본 국적자 “혈통”인 Jus Sanguinis에 의해 결정된다. 나라 안에서 태어난 기초.혈액을 일본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부모가 한 명 이상인 경우에만 시민이 될수 있다. 귀화 또는 난민 자격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는 예외가 있지만 그 예는 드물다.

2008년 보수적 의원들은 DNA검사가 일본 시민권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과정의 일부가 될 것을 제안했으며, 생물학적 표지가 외국인 혹은 일본인 혈액을 식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관행은 이상적인 시민권이 100% 인종적으로 일본인으로 구성된 일본민족을 장려한다. 국적에 대한 일본의 정의는 ‘혈액’을 기준으로 민족성을 강조한다.

국적없이 일본에 거주하는 Chosen-seki 한국인 영주권자들

일본에 사는 한국인은 “ZAI NICHU 한국인”으로 알려져 있다. 자이 니치 (Zainichi)라는 단어는 1910-45년 한국점령기에 일본에 와서 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패배한 후에도 계속 남아 있는 한국 민족공동체를 의미한다. Zainichi는 한국 국적과 한국 여권을 가진 일본 영주권자 또는 한국인이지만 한국국적을 얻지 않기로 선택한 일본 국적자는 “Chosen-seki”(한국 거주지)입니다. Chosen-seki는 기술적으로 무국적이지만, 종종 제 3국의 여권을 소지하거나 일본으로부터 임시여행 서류를 받아 합법적으로 국경을 통과할 수 있다. 1947년에 일본은 이들 일본인들에게 국적을 “조선”이라고 명했다. 이는 마지막 한국 제국의 이름을 가리키는 명칭이다.

차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Chosen-seki Zainichi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확고하게 서 있다고 주장하지만, 일본 국가와 사회는 이 지위를 계속 다르게 취급하며 정부에서는 정식 지위로 인정하지 않는다. Zainichi는 일본인이 수혜를 받는 의료 등 복지혜택을 받지만, 현실점에서도 한일관계가 악화될 때면 사회적 차별의식은 더욱 눈총을 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본은 여전히 이민을 제한하여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입장은 근본적으로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경쟁력 유지와 근본적으로 상충되어 결국 뒤늦게서야 작년 3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민개방을 공식 발표하였다.

3)미국의 영주권자들 (그린카드 홀더)

미국 재외동포현황 2,546,982명 2019년

10여년전 파리에서 자영업을 하오던 한인자영업자가 미국 세무청의 추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게 된 적이 있었다. 과거 수십년간 미국의 패스포트와 그린카드 영주권자들은 전세계인들 모두가 선망하는 막강한 경제적, 사회적 파워를 자랑해 왔다. 하지만 2015년부터 시행된 해외구좌 자진신고의무 FATCA법 이외에 글로벌 연간소득 신고법이 유효하여 미국국적과 그린카드 포기자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국적포기도 거주지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과에 신고, 서명 절차만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포기를 위한 신고절차와 해당 벌과금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미국 국적(그린카드) 포기 절차

미국 국적포기 비용은 미화 2,350 달러이며, 국적포기후에는 번복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6개월정도가 소요되며, 국적포기후에는 더이상 미국영사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국적포기와 관련된 추가정보위한 미국무부 웹사이트 .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travel-legal-considerations/us-citizenship.html>

미국국적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두번의 방문이 필요하며 첫번째 방문예약을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Notarials and other Services” 선택하여 직접 하고, 예약일에 미국여권 또는 미국시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하고 미국시민과를 방문한다. 첫번째 방문시 국적포기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있을 것이며, 두번째 방문일자는 첫번째 방문일로 부터 약 2-3주후 혹은 거주국의 사전에 따라 대사관.영사과 직원이 알려준다.

미국 국적,그린카드 포기세 (Expatriation Tax) 미국세법 (Internal Revenue Code: IRC) 877A조

미국 정부는 2008년 6월16일 부터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라는 독특한 세금을 신설하여 시행하였다. 국적포기세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국적포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의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첫째, 국적포기일 현재 순자산가액(Net Worth)이 2백만불이상인 대재산가, 둘째, 국적포기일 직전 5년간의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일정금액(2016년 \$161,000, 2017년 \$162,000, 2018년 \$165,000)을 초과하는 고소득자, 셋째, 국적포기일 직전 5년동안 세금과 관련된 사항을 집계한 양식 8854(Initial and Annual Expatriation Statement)을 인증받지 못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국적 포기일 현재 전세계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양도소득(Capital Gain)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에 따른 세액을 계산한다. 2016년의 경우 양도소득의 693,000불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참고-2016년도 과세소득 693k 달러가 공제된다. 예를 들어, 순자산이 2백만이고 세율이 23.8%인 경우 476k의 세금이 발생하여 첫 693k를 공제 (2016년)하여 지불할 세금이 없다. 290만 달러 이상만 국적.그린카드 포기세가 발효된다 (290만 x 0.238 = 690k)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2016년 역이민을 갔는데, 국적포기일 현재 미국에 시가 1백만불짜리 주택 1채(2009년 \$500,000에 취득), 한국에 시가 3백만불짜리 상가 1동(2007년 1백5십만불에 취득)이 있었다. 이 경우 주택과 상가를 국적포기일 현재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주택 양도차익 \$500,000, 상가 양도차익 \$1,500,000 합계 \$2,000,000에서 공제금액 \$693,000을 차감한 \$1,307,000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미국에 국적포기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적포기를 하는 자는 국적포기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4월 15일 까지 개인 소득세 신고서와 국적포기일을 기준으로 한 양식 8854 등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국적포기일이 속하는 해부터 10년동안 매년 양식 8854를 보고해야 한다. 국적 포기일 현재 고소득자 또는 대재산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국적포기세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보고를 해야 한다.

미국에 있는 재산으로서 국적포기세 과세 대상이 된 재산을 나중에 양도 하였을 경우 국적포기세를 산정할 때의 시장가치로 취득가액을 조정한다. 외국에 있는 재산이 국적포기세 과세대상이 된 경우 나중에 그 재산을 양도하면 당해 국가에서 취득가액을 조정할 수 없으므로 이중과세의 가능성이 있어 국적을 포기하면서 재산도 같이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

고소득자나 대재산가가 국적이거나 영주권을 포기하였을 경우 양식 8854(Initial and Annual Expatriation Information Statement)를 보고하여야 하는데 만약 보고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000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4) 라트비아의 Non-Citizens 영주권자들 (유럽)

200만 라트비아 인구중 25만명의 국적없는 Non-Citizens 비시민권자들

라트비아 법률상 비시민권자 (라트비아어

: nepilsoni)는 라트비아 또는 다른 국가의 시민은 아니지만 라트비아 법에 따라 “라트비아 또는 다른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구소련인들”이다 “. 라트비아 정부에서 발급한 Non-Citizen 여권 및 기타 특정 권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 그들 중 약 3분의 2가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폴란드, 리투아니아 출신자들이며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구 러시아인들이다.

Non-Citizen은 “라트비아 공화국에 거주하는 구소련 시민 (...)의 시민권 자이며 임시 결혼 상태에 있는 사람과 동시에 다음 조건을 준수하는 자녀들이다. 1) 1992년 7월 1일 거주지 등록에 표시된 거주지에 관계없이 라트비아 영토에 등록되었거나 1992년 7월 1일까지 라트비아 공화국에 마지막으로 거주한 거주지가 있거나 법원 판결에 의해 결정된 경우 10년 연속 라트비아 영토에 거주한 증명이 가능한 자 2) 라트비아의 시민이 아니고 3) 다른 국가의 시민이 아닌 경우 “자녀가 태어났을 때 부모 둘다 Non-Citizen이거나, 부모중 한 사람이 비. 시민권 Non-Citizen이지만, 배우자가 무국적자이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상기 언급된 자녀” 또는 부모중 한쪽인 비 시민권자 Non-Citizen이지만 배우자가 무국적자이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부모의 상호 합의에 따라 Non-Citizen을 취득할 수 있다.

라트비아 비시민권 'Non-Citizen'여권 (2011). (Dimitry Kochenov & Aleksejs Dimitrovs 제안서 2016)

라트비아가 독립후 (1991년 8월 21일) 출생 한 자녀가 부모 둘다 비시민권자 Non-Citizen일 경우 부모중 한 쪽 혹은 양쪽 동의로 라트비아 비시민권 Non-Citizen 패스पोर्ट를 취득할 수 있다.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에만 있는 이들 Non-Citizen은 ‘국적이 없는 자’들과 동일하며 국제법상 유일한 실례이기도 하며, 나라와 사회적 위치가 다르지만 국적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Chosen-seki 한국인 출신들과 유사한 처지에 있는 것이다.

비시민권자 'Non-Citizens'들의 영주체재신분은 계속 유지되어서, 라트비아 국적으로 귀화율이 매우 낮으며 단기간의 미래에 이들의 신분이 별할 것 같지 않은 추세이다. 유엔의 인권옹호단체는 (UN Human Rights Committee) 이들이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도 없는 사유로 민주사회내에 인종차별로 (inter alia)로 주장한다. 라트비아법에는 시민권자들과 비시민권자들이 엄연히 상호의무 규정이 있어서 EU법은-국제법- 멤버국들이 자국내 국민들의 자격은

멤버국 정부의 소관으로 규정되고 있어서 이들 비시민권자 'Non-Citizens'들도 자동적으로 유럽시민으로서 유럽권 내에서 자유로이 이동하며 일하고 거주하며, 다른 유럽인들과 동일한 처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에게 유럽시민자격 부여에는 라트비아 정부가 별도로 정치적, 경제적 부담금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주변국 프랑스, 크로아티아, 독일 등 유럽나라들에게 분담금을 요구하거나 5억의 유럽인구에게 특별한 부담을 줄 수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곧 이들 Non-Citizens들은 ‘무국적자들’이 아니라 - 유럽의 여러 기관들의 관점에서는 묵인하는 것이 - 사실이지만, 유엔과 다른 국제기관들은 늘 묵인하는 것은 아니다. 라트비아 정부는 'Non-Citizens'들이 거주를 위해 비자를 체류허가 발급받을 의무가 없으며, 일하기 위해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을 의무가 없으며, 단지 투표권만 없을 뿐 ‘모두 갖춘 시민권’이 아니라서 투표나 정치정당을 만들수 없으며, 정부요직, 몇 전문분야, 제한된 구역의 토지 소유, 라트비아 영토바깥의 구 소비에트 지역에서 일했던 시기의 연금혜택에서 제외되는 차이만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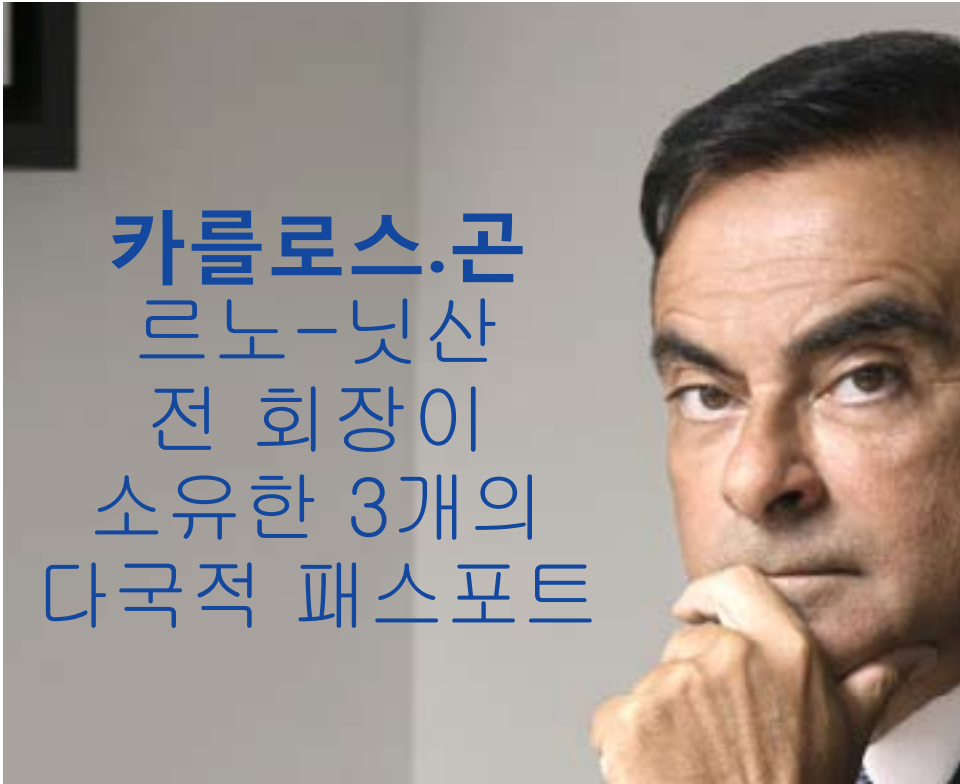
예를 들어 EU정식멤버국인 옆나라 프랑스, 크로아티아인 노동자가 라트비아에 와서 일하는(TFEU) 조건과 비교하여 볼 때, 라트비아 자국내의 'Non-Citizens'보다 EU권외 러시아, 한국등 제3국 출신 노동자들을 (EU Long Term Resident Third-Country Nationals Directive) 우대해야 하는가?

EU 멤버국들은 제3국 출신자들 보다 유럽 시민권들을 우대하기 때문에, 이태리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을 희망하는 제3국 우크라이나 출신자들에게는 입국초기부터 장기체류비자 의무는 물론 영주권, 노동권, 시민권을 위해 10년 체재의무규정을 요구하지만, 라트비아 유럽시민권들엔 아무런 입국제한없이 자유로이 정착하여 4년후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라트비아 'Non-Citizens'들은 어떤 처우를 받아야 할까?

유럽법은 멤버국들의 시민권들에 대한 자체적인 인정기준을 존중하며, 라트비아가 자체적으로 ‘국적자’와 ‘실제로 국적자 senso stricto’를 구별하는 독특한 선언을 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 ‘시민자격’과 연결되어 있기에, 라트비아 'Non-Citizens'들이 유럽시민권이 되려면 라트비아 정부가 라트비아 'Non-Citizens'들을 정식 시민권으로 선언하게 되는 시점으로 부터이다.

문의: globalresidence21@gmail.com

==>> 연재 2편 : 프랑스 영주권 취득 가이드스 - 온새미 노마드 2월호 * 저작권 보호 - 온새미 협회



카를로스.곤 르노-닛산 전 회장이 소유한 3개의 다국적 패스포트

소유한 3여권 (프랑스, 레바논 및 브라질)을 모두 담당변호사가 보관중이었는데 어떻게 일본영토를 떠날 수 있었을까? 실제 그는 2개의 프랑스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데 합법인가?

2개의 프랑스 여권을 소지한 카를로스.곤 카를로스.곤의 일본 변호사는 130 일의 구금후 자택체포로 프랑스, 레바논, 브라질 3 개의 여권을 보관중이었는데, 그는 비밀코드로 폐쇄된 두 번째 프랑스 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여권이 소지된 경우 변호사에게 여행을 위해 암호를 풀기 위한 코드를 요청해야 했다. 이 여권은 법원에서 그가 내부적인 이동이나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가되었었다. 하지만, 전회장은 공항직원들에게 쉽게 발각될 것을 피하기 위해 일본국경을 넘을 때 필수적인 여권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불법적으로 일본 영토를 떠났다.

어떤 경우에 두개의 프랑스 여권을 소유할 수 있는가?

프랑스 여권 두개를 갖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하며, 많은 사람들은 다른 여행국들의 스탬프들을 보관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 규칙에는 특히 사업가, 언론인 및 항공요원에게는 두가지 예외가 있다.

해외여행이 잦은 경우 비자신청시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여권이 제출되어 대기중인 사이에 그러나 이 기간동안 여행해야 하는 경우 다른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스라엘의 경우처럼 정기적인 글로벌 여행자일지라도 여권에 찍힌 스탬프가 특정국가의 여행자를 거부하는 목적지로 갈 수 없는 위험이 있는 경우다. *이스라엘 스탬프 (지금은 스탬프대신 스티커로 대체됨)로 인해 입국을 거부하는 여러 무슬림국가에서 여행자들은 오랜 검문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여권을 신청하는 방법은? 거주 국가의 프랑스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요청해야 하지만, 공공서비스 웹사이트는

“두 번째 여권의 발급은 권리가 아니라 판단기준을 정하는 행정부의 요구” (가까운 여행 또는 특정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취약한 나라 패스포트, 레바논

카를로스.곤이 어린시절을 보냈던 레바논은 일본과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자국민을 외국에 인도하지 않기에 가능한 것으로 본인의 권리를 찾은 것이다. 부유한 자들이 가족과 자산을 안전하기 유지하기 위하여 고려해 왔던 다국적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은 글로벌 이동이 일반화된 현시점에서는 브렉시트와 같은 예기치 않은 불확실한 내부의 지각변동이나 불안정한 지정학적, 정치적 불안, 예기치 않은 이혼이나 개인파산, 개인 및 가족의 미래와 안전자산을 지키기 위해 선진국들의 일반인들도 이중국적을 고려할 필요성을 실감하게 되었다.

글로벌 연간소득신고 의무를 법제화한 후 많은 미국인들은 남아메리카의 세컨드 패스포트들을 취득하고 있으며, 많은 선진국들의 일반서민들도 부유한 나라들의 부조리성과 과도한 세무를 피해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남미의 취약한 나라들이나 캐리비언 섬나라들 혹은 세금없는 두바이, 드물게는 구 소련에서 독립한 발칸지역의 작은 나라들, 아름다운 자연환경에서 사파리를 즐길수 있는 출신국 남아프리카에 역이민을 고려하기도 한다. 바로 개인과 가족의 미래안전을 위한 예비책이다.

카를로스.곤이 르노자동차의 모국인 프랑스를 피했으며, 더우기 탄생국인 브라질은 제2의 일본국이라고 부를 만큼 150여만 명의 제4세대 일본이민자와 5만여명의 장기거주자들이 사용파울로 은행가와 일부 경제권을 쥐고 있는 나라로 불리한 점, 레바논으로 피신결정은 3개의 다국적 국가들 중에서 일본정부에 신변양도가 불가능

한 취약한 나라, 자신을 보호해 줄수 있는 레바논의 패스포트만이 가져다 줄수 있는 국제법상 합법적인 해결책이었다.

캐나다,미국으로 가족을 데리고 떠났던 홍콩,타이완 이민자들의 대부분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북미의 이중국적만 취득한 후 주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국으로 다시 돌아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출신국의 이중국적 허용여부의 중요성을 알수 있다. 70년대 보트피플로 프랑스에 이주했던 베트남, 캄보디아인들은 대부분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였지만 (현재4세대 가족포함 40여만명) 출신국이 허용하는 이중국적 제도로 이민초기의 프랑스는 물론 90년대이후 북미의 베트남 이민자들이 자국경제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이중국적, 다국적 시대 21세기 -가족의 미래와 안전자산 유지를 위한 장기플랜용 패스포트-

한국은 물론 대부분의 나라들은 2개의 여권을 발행하지 않는 원칙으로 글로벌 이동이 필수인 전문인들에게는 많은 불편이 따른다. 프랑스회사의 40여 나라의 글로벌 마케팅을 30여년 담당해 온 한 한국인은 비자신청을 할때마다 한개밖에 허락되지 않는 한국여권 사유로 수시로 발목이 묶여, 프랑스국적 취득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실토했다. Joëlle Garriaud-Maylam 프랑스 디아스포라 상원의원은 250만 이상의 프랑스인 해외거주자들의 절반은 이중국적 소유자이며, 이들은 사업가, 프로젝트 매니저, 수출입, 컨설턴트, 교사들로 프랑스의 대외무역과 소프트파워의 견인역할을 하는 리치.네트웍을 형성한다고 발표했다.(The Economist, 27 June 2015).

대중에게 이미 널리 애용되는 럭셔리 디자이나 핸드백이나 이상년마다 새로이 콜렉션하던 크로노 스위스시계나 팬시자동차, 혹은 호화로운 펜트하우스, 개인요트가 더 이상 부의 척도가 아니다. 각나라의 부는 더이상 자원이 풍부한 땅, 넓은 땅과 많은 인구자원이 우선이 아니며, 주변국들과 또 한 글로벌 연결성이 더 많은 부를 가져오는 시대적 급변화에 따라서, 글로벌 이동성에 한걸 자유로운 도시국가들이 보여주듯 (싱가폴,두바이,룩셈부르크) 이중국적이거나 다국적의 수개의 패스포트 숫자가 개인의 부를 가름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홍콩의 소요사태, 미중 무역전쟁, ‘해가지지 않았던 19세기 영광의 대영제국’도 역사속에 사라졌던 모든 대제국들이 멸망해왔듯이 내부적인 자멸을 부르는 브렉시트 등 지정학적, 정치적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여 개인 및 가족의 미래와 안전자산을 지키기 위해 각국의 부호들, 전문인들은 이중국적 및 다국적 패스포트들을 보유하거나 고려한다.

남북이 대처하는 정치적인 불안요인으로 한국의 정치인들은 매년 미국국적을 사전 포기하거나, 강경화 장관 ‘미국 국적’ 장녀의 “한국 국적 회복” (2018년) 사례처럼 매년 큰 사회적인 물의를 빚고 있으며, 진취적인 글로벌 개방경제정책을 추구하는 한국의 이중국적 허용폭은 동북아시아 주변국들과 달리 단계적으로 허용되어 가는 쪽으로 기대되고 있다.